

ROK-JAPAN FUTURE DIALOGUE

JAPAN-ROK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날짜: 2020 년 11 월 21 일

주최: 재단법인 여시재,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형식: 온/오프라인 비공개 세미나

참석자

한국 (가나다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전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영	KGM Lab 대표(전 국회의원)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 교수
황세희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

일본 (오십음도순)

아키야마 마사히로	일본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대표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의원(자유민주당)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세키야마 타카시	쿄토대 준교수
타이라 마사아키	중의원 의원(자유민주당)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야마구치 츠요시	중의원 의원(자유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협력 제안들

1. 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 1)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2)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의 재정립, 3) 범부처/민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2. 장기 전략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의료는 '커뮤니티중심 의료'에 있다. 비대면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 가능한 '지역중심의 새로운 의료'가 필요하다. 건강모니터링, 스마트의료를 통해 집에서 상시적으로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3. 한일 디지털 협력으로 1)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일간 차세대 통신 협력, 2)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3)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4) AI 정부의 구축을 제안한다.
4. 도시로의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산학협력모델의 추진, 2)지방대학과 스마트산업단지간의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지역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한일 공통의 과제이기에 한국과 일본은 스마트시티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5. 앞으로 개최될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협력을 제안한다. 다가올 2021 년 도쿄 올림픽은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이어 2022 년 베이징 올림픽을 거쳐 2024 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개최의 추진도 제안한다.
6. 2019 년 G20 에서 제시된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한일, 구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유통권을 형성에 최대한 협조한다.
7.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준수한 한국과 일본간 기술적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애플리케이션 개발 성공 사례 등 감염병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에 알맞는 한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역체제를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 7-1. 민주주의, 자유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배려하는 나라는 기술이 다르다. 블록체인, 데이터 샌드박스, 기밀계산기술, 분산 ID 등 새로운 기술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바이스로부터

쌓은 정보를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으로 개편하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며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이다.

7-2.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의료 체계 및 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이 중요하다.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는 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다.

8.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함께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몽골, (북한)) 연계의 틀을 한일 공동으로 제안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구축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바이러스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9. 인종적으로 매우 비슷한 한국과 일본은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임상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백신,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10.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나 최근 코로나 19 의 영향을 보면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투트랙 전략으로 역사 문제 및 기타 어려운 문제를 분리해 한일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여시재와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구축을 위하여 한일간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9년 여름 도쿄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국회의원 및 석학들이 모여 향후 한일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 영향으로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던 세미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을 통해 한일간의 대화를 이어갔다. 올해 여름에는 한일 전문가들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대응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중 경쟁시대의 한일 협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일 정치인들이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협력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양국간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으로부터 두개의 발표가 있었다. 이하는 각각 두 발표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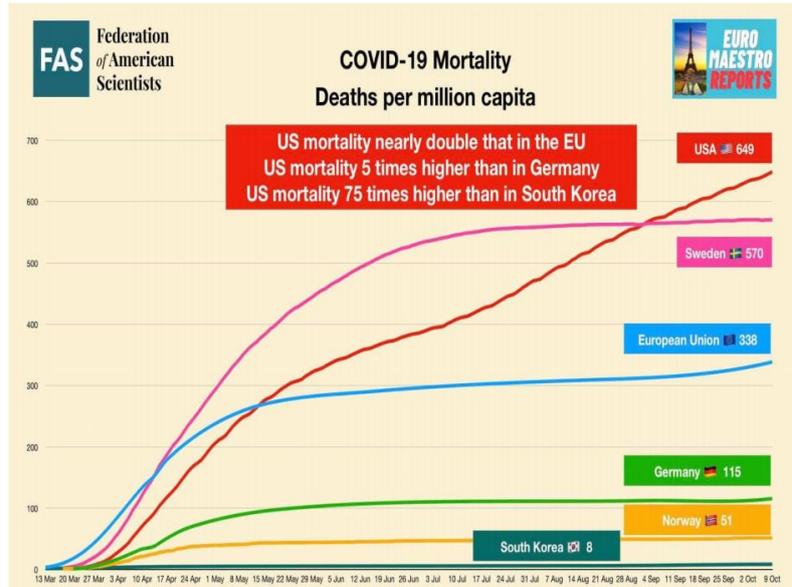
발표 1

“한국의 COVID-19 대응과 미래의료전략”

첫 번째 발표에서는 다시 올 수 있는 팬데믹 위기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 19 이전에 메르스(MERS)라는 중요한 감염병을 2015년에 경험하였다. 당시 감염자 수는 186명, 사망자 수는 39명이었으나 이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체계를 갖추 수 있었던 점이 지금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동북아시아 전체를 보아도 과거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동북아시아가 현재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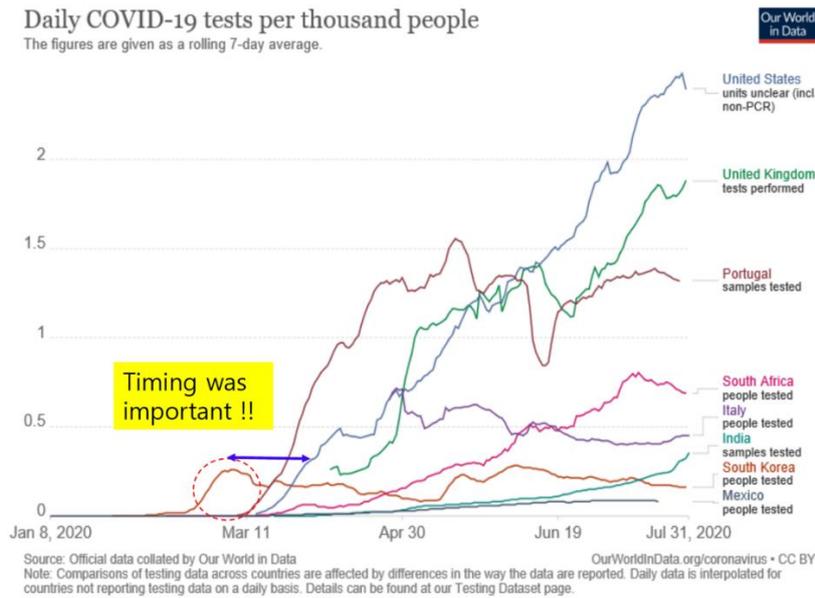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숫자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미국은 649명, 스웨덴은 570명, 유럽연합은 338이었으며 이러한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8명에 그쳤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유럽과 북남미와 같은 나라들은 사망자수가 많은 동시에 GDP가 하락하여 타격이 컸다. 반면 아시아 나라들은 사망자수가 적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덜하였다.



인구 100 만명 당 코로나 19 사망자수 (출처: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그렇다면 한국 방역의 성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확진자 수가 적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치명률이 낮았다는 점이다. 확진자 수가 적었다는 것은 방역 대응을 잘했다는 뜻이며 치명률, 사망률이 낮았다는 것은 방역과 의료적 대응을 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경제적 피해도 적어 이는 사회적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3T+2P' 전략, 즉 1) 사전준비와 조기진단(Testing), 2) 공격적 접촉자 관리(Tracing), 3) 효율적 치료관리(Treatment)의 세가지 'T'와 1)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보호장비(Social distancing and Personal protective measures), 2) 지역사회 공중보건인프라(Public health infrastructure)의 두가지 'P'에 집중한 전략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이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은 첫 환자 발생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국가의 차이점은 한국은 초기에 많은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검사 건수도 그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조기의 진단이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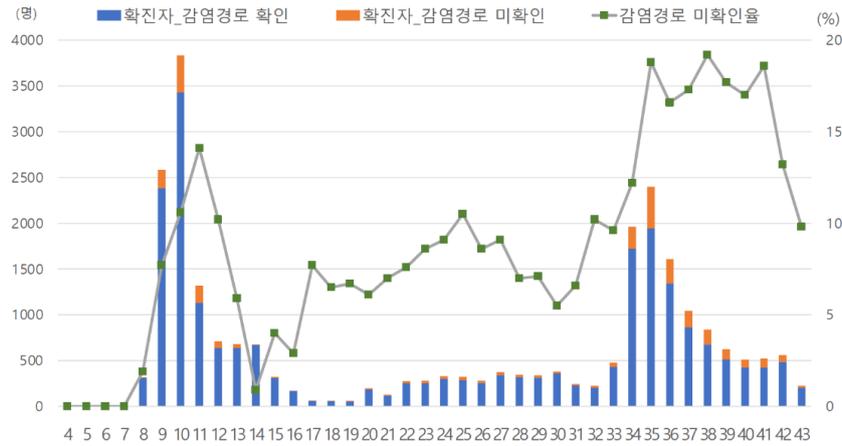
발생 초기의 검사 차이가 한 국가에서의 확진자 수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출처: Our World in Data)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의 향후 과제들

그러나 한국도 코로나 19 확산을 비교적 잘 통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 번째 확산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확진자 수 증가의 특징은 감염경로가 미확인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경로 미확인을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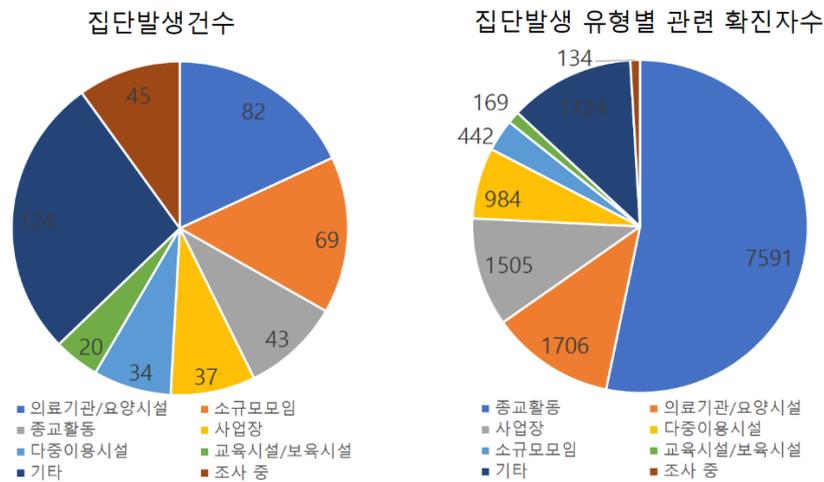
한국이 집단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향후 코로나 19 대응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집단발생건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며 그 다음이 소규모모임, 종교활동 순이다. 특히 종교활동의 특징은 발생 건수 당 확진자수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확진자수 사이에서 그 강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보통 확진자 수가 많은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다가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킨다. 그러나 완화시키면 또다시 클러스터(cluster) 사이즈가 커지는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와 확진자수간의 상호관계성(Reciprocal feedback)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다.



※ 자료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포럼 자료

10 월 20 일 기준 한국 전체 확진자 25,333 명 중 2,978 명(11.8%)이 감염경로 조사 중 (출처: 질병관리청)



※ '20.9.30일 기준 클러스터 내 1개 이상의 집단발생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 중복 집계
 ※ 자료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포럼 자료

집단발생 유형별 집단발생건수 및 관련 확진자수 (출처: 질병관리청)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지속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단기적,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방역 대책으로 세가지 측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위험평가와 감시체계의 구축, 두 번째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의 재정립, 세 번째로 범부처,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

첫 번째 위험평가에서 과학적인 위험평가와 유행 전망 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미발견 감염자와 감염경로 미파악 규모를 추정하여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무증상군 및 증상 발현 전 환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자(silent spreaders)'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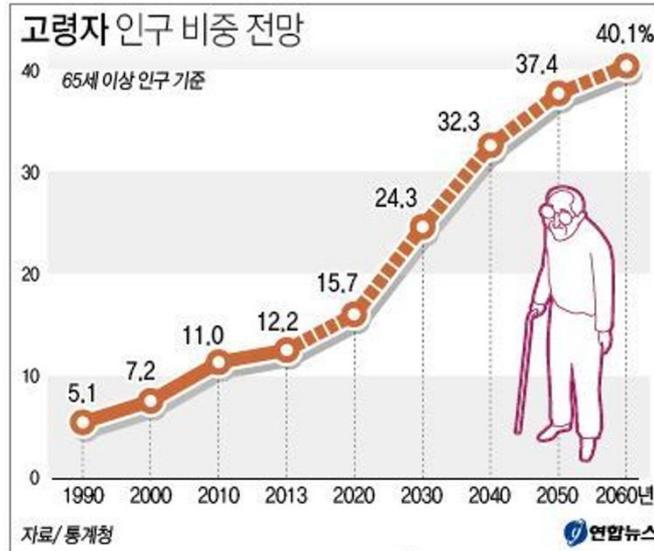
두 번째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의 재정립에 있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사 양식과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 취합 과정에서 전산화 및 관련 임상자료와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학 조사 인력의 확대와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추적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디지털 추적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중앙/지방 정부간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기적 대응 전략은 바로 '커뮤니티' 중심 의료

상기의 대책들은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이었다면 장기적인 전략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의 의료는 의료기술만 가지고서는 안되며 의료체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는 더 이상 대학병원이나 상급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에 의존할 수 없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그 이유는 고령자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크게 연관이 있다. 2020 년 한국에서 65 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 퍼센트에 도달하였다. 2030 년에는 24.3 퍼센트가 될 것이며 2050 년에는 40 퍼센트 가까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10 년 더 빨라 현재 25 퍼센트를 넘고 있다. OECD 주요국들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고령자 인구 비중 전망 (출처: 통계청)

커뮤니티 중심 의료에서는 과거의 질병 중심 의료에서 사람 중심의 의료로, 의료 전달 체계에서 의료 협력 체계로, 병원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이 건강 모니터링이다. 건강모니터링에는 신체이식형부터 시작하여 부착형, 의복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심지어는 화장실의 변기에도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평상시부터 체온을 측정하여 전염병 시대에 충분히 관리,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거울, 침대에도 스마트도구가 되어 평소와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집이 의료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각 집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상급종합병원과 연결이 되어 이것이 의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의료 시스템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미래사회의 건강관리 전략이 되어야 한다.

발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협력 제안”

코로나 19 를 겪으면서 전인류에게는 동일한 시험문제가 주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어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해지는 현실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디지털화로 인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1인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고용은 줄어들고 소득에 대한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120살 시대가 오게 되면 65살에 정년을 한다고 하여도 남은 5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 만성적, 상습적인 질병을 가져올 위험은 더욱더 커진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살면서 고비용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은 급등하여 생활비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인재들은 계속 해외로 유출하게 된다. 코로나 19는 이러한 사회에 어떠한 생존의 룰이 필요한지 질문을 던져주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농경사회에서는 수로나 쌀, 소금, 철과 같은 것이 공공재였으며 산업사회에서는 전기나 상하수도, 철도와 같은 것이 공공재였다. 지금 디지털 혁명시대에서는 바로 '지식'이 공공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IQ가 향후 5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면 마치 상하수도나 전기와 같이 무한정의 지식이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력 또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이 되어야 한다.

한일협력을 위한 7가지 제안

첫 번째 제안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앞으로는 5G, 6G, 인공위성과 같이 차세대 통신 기술을 통해 지식이 이동하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의 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첫 번째 협력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국가전자도서관의 구축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학교 교실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공급할 수 있는 지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133만권 중 66%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도서관 밖에서 열람이 불가하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국과 일본의 대학교 논문을 서로 검색하여 보다 저렴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구축이다. 앞으로 점점 더 온라인 대학이 늘어나고 하버드대학과 같은 세계 100대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른바 교육판 넷플릭스(Netflix)를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류 학점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더 많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산학협력모델의 진화이다.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이 소멸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방 대학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아이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대학이 함께 직업교육을 추진하거나 방학 중 대학 기숙사를 이용한 초·중·고 학생 대상 캠프의 개최 등 이러한 노력들을 한일이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제안은 지역 대학 부지 내에 첨단 공장 시설을 유치하여 산학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실시할 경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에서도 인재를 구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지방 대학을 활용하여 그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만 들어선 생산시설 중심의 지역이 아닌 산업단지에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산학융합지구의 형성을 제안한다.

여섯 번째는 AI 정부의 구축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지식정보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재구성하여 모든 행정 업무를 집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행정 정보를 네트워크에 저장하여 필요하는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 제안은 앞으로 개최될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협력을 제안한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동북아 지역에 따뜻한 기운을 가져왔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 빨리 개발되어 다가올 2021 년 도쿄 올림픽에는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이어 2022 년 베이징 올림픽을 거쳐 2024 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2028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올림픽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기회로 한 대북 외교,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정토론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일본측을 대표하여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의견과 코로나 19 이후 경험하고 있는 격변 속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져야 할 인식과 협력 가능한 부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100 년에 한번 온다는 큰 전환기에 있다. 즉 지난 100 년 안에 있었던 제 1 차 세계대전, 스페인 감기, 세계대공황, 제 2 차세계전이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는 이러한 세계에 역사에 남을 전쟁, 감염병, 금융위기를 다시 한번 겪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 새로운 세계상을 그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일본은 메르스(MERS)의 경험을 살려 코로나 19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 검사 확대, 철저한 격리, 정치로부터 독립한 사령탑의 설치 등 감염병, 공중 위생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자동차와 같은 민간 기업이 연수원을 개방하여 건강관리센터로 활용을 한 사례도 일본이 배워야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캐시리스를 더 본격화 시키며 이러한 COVID-19 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에서도 데이터에 바로 접근하여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험에서, 또한 대만으로부터 배우는 겸허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패권국으로 남으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행방에 주목하여 대립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속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일본은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강조된 남북의 용화가 향후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과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현실을 직시하고 영토문제, 역사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인구감소 문제나 도시 집중, 지역으로의 분산, 내수 경제의 강화 등 여러가지 공통된 도전 과제들이 많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유토론

자유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일 협력을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이하는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협력 제안들이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IT를 많이 활용했다. LINE이라는 SNS 회사의 협조를 얻어 순식간에 대량의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접촉자 확인 앱을 활용해 감염병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2019년 G20에서 합의된 '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구미, 아세안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형태의 데이터 유통권을 형성해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의 이점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으면 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책만을 생각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추적하여 격리시킨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할 경우 감염병이 종식될지 몰라도 자유주의라는 우리의 근본적 사회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 자유주의라는 근본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코로나 19 확산 현황, 확진자 접촉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적으로 앞선 양국은 역사문제와 정치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함께 전염병 대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의료 체계와 의료 플랫폼의 중요성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DRAM),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그리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CMOS image sensor)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은 긴 시간 동안 기술 협력을 계속해 왔다. 반도체 소재 규제와 같은 비협력적인 방향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기술 교류,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 더욱더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간 프레임 구축에 관해서는 TPP, ASEAN, RCEP과 같은 여러 협력 틀이 존재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틀이 빠져 있다.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구상해 나가고 싶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미국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나중에 북한도 이 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연계의 틀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 역시도 국경을 넘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시 올 수 있는 위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5년, 10년마다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지의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일간에 바이러스 유전정보의 공유, 백신 공동연구, 공동생산과 같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은 인종적으로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도 비슷하다. 한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조기에 백신 및 치료제의 생산, 개발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책으로 국제사회에는 두 가지 다른 기반, 즉 민주적 사회와 권위주의적 사회가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주사회를 기반으로 투명성, 민주성이 높은 방역체계를 전세계에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두 가지 다른 기반인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와 실버 세대에 대한 투자가 있다. 고령화 사회인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나갈지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결국 정치 리더십에 달려있으나 보완 차원에서 1.5 트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국의 경우 감염 상황을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며 대응하고 있다. 타격이 큰 외식업, 상점 등에는 집중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 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에서 제공하였으나 재정은 적자다.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연결, 커넥션이 크게 바뀌어 다양한 과제가 던져졌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의 커넥션이 열망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국내지향적인 분위기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시 되돌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일관계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역사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국가적으로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을 빼앗아 군대를 해산시켰다는 점을 일본인은 인식해야 한다. 일본에는 이 시기에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병합 이후의 근대화는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과 인생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쓴 자서전이나 투트랙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 등을 공부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도 해당되며 일본에 대해 연구해주기를 요청한다.

앞으로 코로나 19 로 인해서 바뀌게 될 사회의 양상과 지방활성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Go To Travel' 정책도 코로나 19 로 단절된 지방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하나이다. 앞으로는 경제 또는 의료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닌 양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과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한일병합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으며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라고 해야 한다. 한일병합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근대화에 협력했다거나 개발에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만든 다음에 한국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개발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악의 근원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가 대한강경파였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협력이 매우 어려웠으나 최근 코로나 19 의 영향을 보면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투트랙 전략으로 역사 문제 및 기타 어려운 문제를 분리해 한일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자유주의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통점을 찾아내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멸 혹은 수명 120 세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서 스마트시티를 한일 공동으로 연구한다. 또한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없는 정상회의를 만들어 동북아시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1.5 트랙으로 심도 있게 다뤄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나라들은 테크놀로지가 뛰어나다. 일본에서는 데이터 샌드박스(Data Sandbox), 블록체인, 기밀계산기술, 혹은 분산 ID 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드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검토하고 싶다. 또한 디바이스는 정보를 쌓는 단순한 단말이며 그것을 빅 데이터, AI, 알고리즘으로 개편하여 되돌아오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한일 간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리발언

자유토론 후 정리발언에서는 한국측과 일본측 각각 대표자 한 명으로부터 발언이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번 세미나와 같은 양국간 대화를 가진다는 것의 의의와 향후 한국과 일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먼저 일본측의 발언이 있었다. 지금은 미중 갈등 양상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 갭이 생기게 되었다. 갭을 없애고 우선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해결책을 한일 양국이 계속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여 TPP, ASEAN, RCEP, 동아시아 연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구축을 추진하며 중국도 포함하여 민주주의적 요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어서 한국측의 발언이 있었다. 코로나 19 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는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여 인류에게 공통의 도전과제를 주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마주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다.